



진리
평화
창조

외대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1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46호 1995년 5월 30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1

지면안내

3면: 양캠 총학생회장의 무기한 단식돌입 배경

3월말 나오기로 한 94년도 결산 세부집행내역서 공개, 요구 안 관련, 학생회측과의 대화장구 개설을 요구하며 시작된 단식의 배경을 알아본다.

4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과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재재를 이해하고 신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관계개선의 선결과제들이 제시된다.

5면: 문화·종교 차이 극복 못 하는 동남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극한 자긍심과 우월의식이 퍼지면서 내는 민족분열의 원인이 된 동남아를 찾아본다.

6면: 유럽 미술관 가이드

본교를 방문한 여학생들이 김지현 씨가 쓴 '유럽미술관 가이드'를 소개하고 책을 쓴 동기들과 내용을 배려하며에 대한 인내까지 소개한다.

7면: 나는 바리의 텍사스권

10년을 프랑스 바리의 광광력으로 살아온 그를 만났다. 국적을 바꾸면 프랑스인으로서는 '모레'를 볼 수 있지만 그는...

8면: 노동·학생 탄압은 정부의 허드레

지치기를 몰래 보려는 정부의 마지막 음모. 그 동안의 경과와 정부의 의도를 알아본다.

9면: 제 2의 을사조약-한미행정협정

국민이 폭행을 당해도 사법처리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 잊지 못한 1911년 을사조약. 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고발한다.

10면: 그린벨트, 무너지지 않는 실정승인가?

본교 교육환경개선추진에서 그린벨트해제 상황을 진단한다.

11면: 대중제 사진특집

양캠 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94년 결산세부내역서 공개 등 요구



94년도 결산세부내역서 공개, 교육환경 요구안 관련 '학생회측과의 대화장구 개설'을 요구하며 양캠 총학생회장이 중정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어제 (29일)부터 양캠에서 총학생회장이 대학당국의 '94년 결산세부집행내역서 공개'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안 관련', '학생회측과의 대화장구 개설' 등을 요구하며 총정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이후 대학당국과 학생회측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대학당국이 5월말에 공개하기로 한 94년도 결산과 관련, 경리과와 양립하지는 않는 31일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캠에서 총학생회장은 94년 결산에서도 학생지도부·행사보좌비·운영보조 등 의혹이 제기되는 10개 항목의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부정이 대학발전투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총학생회가 교육환경·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사항

박교수, 노동당 가입 부인

검찰, 가혹행위 사과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창희교수가 안기부에서 자백내용과 수사발표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이 내용은 가족과의 집결을 통해 밝혀졌는데 박교수는 집결 당시 "나는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북한에 편지를 보낸 적도, 간담회위원한 적도 없다"며 "안기부에서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죽는 것이어도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다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금에는 시화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용인캠퍼스에 학생회와 장석민(동학·미어) 11군은 "총학생회, 요구안에 대해 대학당국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겨우 내놓은 답변 내용도 너무나 불성실하다"라며 "대학총합평가인정제를 앞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학당이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대학당국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7면)

이거범 검사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정석민 총학생회장은 전화로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교수에 대한 예의를 지켜줬으면 한다"라는 말을 전했고 이거범 검사는 "그런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간중에는 시화와 학생을 중심으로 용인캠퍼스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박창희교수 석방을 위한 시명운동'이 진행됐는데 첫날 1천여명의 학생들이 시명을 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고 금요일까지 모두 2천여명의 학생들이 시명운동을 벌였다.

한편, 시화와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민주광장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번주부터 공동대행위원회는 박창희교수의 사안이든 엄정사를 제차·배후로 엄서보내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부)

6·3 대회 고려대에서 열려

아시아 청년 평화포럼 등 다양한 행사

'조국통일과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를 위한 남북해방청년학생대회' (이하 6·3대회)가 오는 6월 29일(금)과 30일(토) 고려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6·3대회는 기존 무대 중심의 통일행사에서 벗어나 갖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해의 동포가 참가하는 '통일대토론회'와 아시아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청년 평화 포럼' 등은 그 행사여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총련 관계자는 "북한과 해외동포의 경우 한국정부가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입국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아시아 각국 청년대표들의 경우 여행등의 목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아 오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청년 평화포럼은 성사가 가능하다"며 "현재 11개국에서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토론회 이외에도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놀이 및 백일장대회, '가장행렬 입장식' 등의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이번주부터 '통일선언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6·3대회에 이를 형에 모아 '민족화해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의 청년학생 통일선언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이 통일선언운동과 관련하여 '6월 3일 중앙일간지'를 전면광고로 실기위해 모금운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는 갑작스런 '반미봉쇄' 조치사건으로 6·3대회를 다소 늦어졌지만 각 과별로 2백여명의 자원봉사단이 꾸려져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 26일(금)에는 '백여명의 자원단들이 모여 '6·3대회의 준비반의 밤'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6·3대회의 관련해 경찰측은 한총련이 신고한 각종 행사들에 대한 불허방향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지만 행사담당자들에 따르면 행사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치는 엄연히 대한사회에서도 적용된다. 대한사회는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얼마나 중추적 힘을 발휘하느냐가 대학의 발전, 나아가 조국의 발전의 여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중제는 대학 속의 개개인들이 하나로 뭉쳐 외대 발전, 조국의 발전이라는 지향점을 공유하고 그로써 우리 개개인의 결의들을 커다란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대중이라는 단어가 '생산과 기원, 놀이의 통일이며 이들의 유기적

반의자

▲올해 용인캠퍼스 축제는 각각의 실리와 재미를 추구하는 개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몇 안 되는 단대는 각각의 주장을 지고 사 람들은 그저 술만 마시는데, 그러면서 술주정이 끊이지 않으면 실 망스로운 모습을 대중제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대중제에서도 소외된 학생들이 존재했고, 물론선 터뜨리거나 주먹질하는 곳처럼 동생들이 풍기는 원시적인 지리에는 한 두명 비범 한 일꾼이 지나갈 뿐이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게 사회를 이루고 사회속에 있을 때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사회를 이룬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함께 할 때만이 힘이 있고 그 힘이 있었기에 우리의 역사는 꾸준히 발전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엄연히 대한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대한사회는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얼마나 중추적 힘을 발휘하느냐가 대학의 발전, 나아가 조국의 발전의 여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중제는 대학 속의 개개인들이 하나로 뭉쳐 외대 발전, 조국의 발전이라는 지향점을 공유하고 그로써 우리 개개인의 결의들을 커다란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대중이라는 단어가 '생산과 기원, 놀이의 통일이며 이들의 유기적

지향점 없는 축제

결합 속에서 한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려는 집단적인 의지에서 유래했기에 대중제는 외대인의 지향점을 하나로 모으고 그를 위해 나아갈 용기와 단 결력을 북돋워주기 위한 민중지향의 장이었다.

▲해방 50주년, 분단 30주년, 통일완전이야 일일이지는 뜻깊은 시기에 학생들의 지향점을 '통일'로 모아져야 하기에 올해 대중제는 통일의 장을 하기로 재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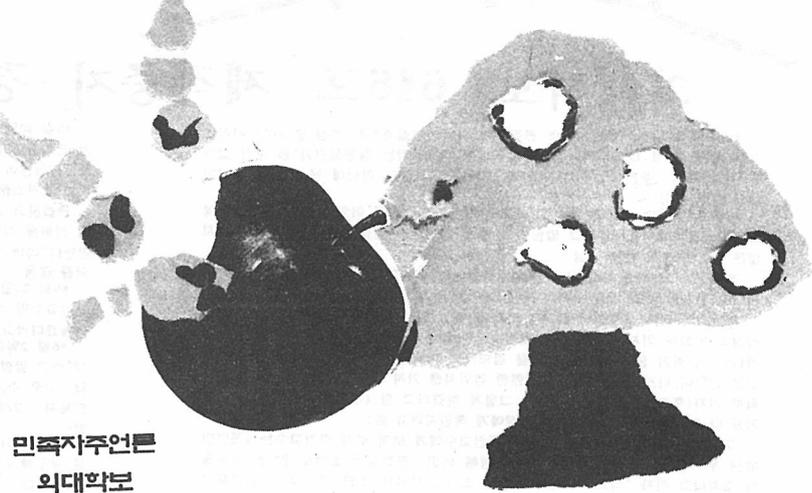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지향점을 살리지 못하고 소수만의 축제로 그냥 수 업을 안고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사실이다.

이런 대중제의 모습은 과감하게 비판해야 하고 대중제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중제에서는 대중제 속에서 건전한 대학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의 대표들이 학생들의 중심을 옮기지 세워 내지 못하고 이번 대중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리고 이들 학생대신들이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올바른 문화 외대의 건설은 불 건건한 사실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수아)

민족과 역사앞에 진실을 말해 오길 40년

학교당국과 그의 시녀 주간교수에 의해 왜곡된 이번 신문을 1만5천 외대인과 함께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민/족/사/적/대/전/환/기/외/우/리/의/과/제/

여건만 조성되면 남북관계 급진전 '확실'

국보법 철폐·조문파동 사과 등 화해노력 선행돼야

95년이 통일문제의 전환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남북간의 상황이 맞게 분단을 강요하는 그동안의 남침침서가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급변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도 주변정세에 따라 변화할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 당사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정세가 남북관계의 변화로 기계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 양국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미연되지 않으면 주변정세의 변화에 비해 남북관계의 변화속도는 훨씬 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문파동과 남북대화의 중단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이 남북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남한 정부는 조문파동 등의 정국안정화 및 북미관계의 급변적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조문파동 때문에 남한 정부와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당국자회담을 비롯한 전인민적인 통일대화를 자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세계 자

본주의 진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민족자립경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던 김일성 주석의 유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 체제의 목표와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양국자 대화의 발전은 북한의 국가주석 취임 이후 구체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통일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조문파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관계 개선에 종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남한 정부의 정책적 태도에 따라 남북 양국간 대화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초기기에 발표한 3단계 37조 통일방안과 37조가 정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한 3단계 37조의 통일방안이다. 3단계는 기존의 3단계 37조의 통

일방안과 차이가 없다. 1단계는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는 남북연립, 3단계는 1민족 1국가 통일방안이다. 37조는 37조 통일방안과 가장 큰 차이는 37조를 삭제하고 37조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37조는 국민의 합의, 공존공영, 민족통일이다.

37조의 논리는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보다도 민족이 우선한다고 밝힌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7조는 통일정책의 핵심이념인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인근 노인의 총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37조 대신으로 대체된 37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일하는 이념으로 삼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과거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계속 되는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은 분단체제를 유지시킨 정치적 요인이다. 남북한 1450년의 장년들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적대적으로 대결하고 있고,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당

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된 이유는 남한 정부의 정치적으로 인해 조문파동 사과리듬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관계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로만 보면 등이 거의 해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남북 대화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남·제)

하게 합의되리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통일정책적인 관점으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으로는 남침 반북의 식을 들 수 있다. 남한의 반공의식은 명백히 반북대결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다.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공존공영이라는 방식의 통일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남한전쟁 이후 벌어진 남북의 식은 여전히 강력하게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의식은 위정자들이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정권교체의 차원에서 활용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제 1항에서 밝히고 있는 비와 같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구축은 국가형태와 조립으로 하는 통일, 체제통합으로 통일이란 아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실천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은 분단체제를 유지시킨 정치적 요인이다. 남북한 1450년의 장년들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적대적으로 대결하고 있고,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당



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된 이유는 남한 정부의 정치적으로 인해 조문파동 사과리듬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관계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로만 보면 등이 거의 해결되어 가는 시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남북 대화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남·제)

을 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의 해소는 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군사대결의 해소는 경제협력은 모래성고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구축운동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 김창수 (광화문3주 연구원)
1. 올해가 왜 민족사적 대전환기인가?
 2. 올해 정세가 왜 통일에 유리한 정세인가?
 3. 올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진전되는가?
 4. 통일 원년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통일원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③-통일방안 정립

우선 통일의 과정을 놓고, 통일방안이 당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 한다는 견해와 전인민적으로 정립되고 합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권과 37조 통일방안에서 추구되었던 논리를 나타내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입장은 당국주도 하에 이를 보완하여 우선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단행함으로써 안으로 단행하여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전인민적으로 정립되는 통일이 7천만 민족 전체의 일인민을 전민족이 통일방안을 정립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당국에 맡겨둘 경우 통일의 상이 왜곡될 수 있으며 통일방안도 쉽게 반북될 수 있지만 전민이 합의할 경우 각계각층의 의사를 고루 반영한 전민족 통일방안이 정립되고 합의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합의된 통일방안을 당국이 쉽게 재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합의를 체결하면 전민족의 원으로 견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복잡한 단계를 두지 않고 단행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경우 '국가연합-1민족 1체제'란 2단계, 김영삼 정권의 경우 '화해협력단계-국가연합단계-1민족 1체제'의 3단계를 두고 있다. 북한은 단계를 두지않는 견해는 여러 단계를 둘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는 결국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흡수통일방안이며 후자는 비핵화 간 다른 제도에서 살아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한다는 연방제 방안으로 된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서로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별의 굴이 깊어지고 대립보다는 대립이 앞서게 된다. 또한 어느 한 체제가 통일해도 흡수통일방안과 흡수통일방안과 동등한 권리의 정비를 지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의 반발로 전제로 전제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반면 1국가 2체제로 통일을 할 경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므로 분산이 대립을 통해 통일을 합의할 수 있으며 급변한 통일으로 오는 혼란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보다 단일한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연방제 방식인 미국·영국·러시아·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영토가 크거나 다민족이거나 지역적 특성이 강하거나, 다양한 정치체제를 통합하면서 단일국가를 세울 수 있는 보편적 정치방안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처럼 두 지역의 제도상의 차이가 큰 경우 단

7천만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상

한 체제로는 결코 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두 지역에는 자치정부를 두고 연방국가를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의 통일방안은 우선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두 지역의 제도의 차이를 인정할 연방제 방안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통일방안 및 통일의 과정에 있어 단행방안이라고 하면 민족이 중심이 되어 방안에 정립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이념이다. 이를 위해서 8·15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정립된 통일이념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되고 여기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가능케 할 많은 단계를 두지 말고 전민이 합의하면 즉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단계를 두게 된다 해도 통일을 지향하는 7천만의 의지로 이 단계를 신속히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안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정착 체결 등 통일국가 수립의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오정민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간사)

두번의 기자 중사태!!
암울했던 70년과 81년이었습니다.

장기농성·무더기 구속!!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8명의 기자해직!!
94년 2학기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민족자주언론 **익대학보**

□ 세계를 진단한다: 전세계의 민족분쟁 ④ - 종교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민족분쟁

식민 지배로 그치지 않는 '문명충돌'

양승윤
(본교 미인어과 교수)

동남아시아 지역의 갈등요인

헨팅턴(S. Huntington) 교수의 '문명충돌론'은 미·소 양극체제 하의 이데올로기 경쟁을 막 끝난 지구촌에 목격한 충돌을 안겨주었고, 즉시 이에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다. 이 논쟁의 주 요인은 종교전쟁이라는 심각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세계 도처에서 최첨단 전쟁수단을 동원한 종교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가 간 혹은 다양한 형태의 민족·종교 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다.



다종족, 다언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민족분쟁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은 종교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불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등 많은 종교들이 존재해 있어 기기에 따른 분쟁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진은 회교도들에 의해 버스가 폭파된 장면이다. (사진: 뉴스위크)

동남아 10개국 모두 문화·종교적 충돌 몸살 앓아 종교적 갈등, 선의의 국가간 경쟁으로 승화돼야

이 그것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국제 경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과 자본이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원과 시장장악의 위와 같은 형태의 현상유지 구도 속에서 변화하고 축소되지 않고, 사회발전이 따라 오지 못해 중대되거나 미묘한 양상으로 세분화되었음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탈냉전과 동남아시아의 전망

문명충돌론과 관련하여 냉전체제의 종식은 동남아 사회에 두가지 가능성을 보인 듯이 확연하게 제시하였다. 하나는 복합민족 국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구제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이 경제전선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다종족(복합민족)으로 표현되는 동남아의 다양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문화·종교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갈등을 선의의 국가간 경쟁(경제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동남아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

이 그것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국제 경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과 자본이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원과 시장장악의 위와 같은 형태의 현상유지 구도 속에서 변화하고 축소되지 않고, 사회발전이 따라 오지 못해 중대되거나 미묘한 양상으로 세분화되었음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탈냉전과 동남아시아의 전망

문명충돌론과 관련하여 냉전체제의 종식은 동남아 사회에 두가지 가능성을 보인 듯이 확연하게 제시하였다. 하나는 복합민족 국가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구제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이 경제전선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다종족(복합민족)으로 표현되는 동남아의 다양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문화·종교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갈등을 선의의 국가간 경쟁(경제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동남아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주장

추산되는데, 이슬람은 불교 문화가 만개(滿開)한 이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다양한 종족에 따라 전통적 동화의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타 종교와 역사를 통하여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

현재 인도네시아를 보면 현 군부의 이종기능(정치적 기능과 국방의 기능)을 골자한 한 신원형 초안을 골라놓고 있는 바(비안타)는 1948년 우(우 Nu) 수상이 집권하여 적극적인 불교 우대정책을 취하면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현재 인구의 30%를 상회하는 카렌족 등 버마의 기독교도들은 우 우의 불교 우대정책이 독립 이전의 전제군주 체제로 회귀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 정부 무력항쟁

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슬람과 불교의 갈등 태국은 여타의 동남아 국가와 달리 종교(불교)의 지상주의와 왕실의 권위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굳건하게 지켜 온 특이한 대립한 자금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면서도 타 종교에 대하여도 관대한 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종교교류의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태국 남부의 밀레이 반도 북부에 위치한 할라파 등 5개 현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이슬람 신봉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정부는 '페니제도'를 통하여 이들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슬람과 불교의 갈등

태국은 여타의 동남아 국가와 달리 종교(불교)의 지상주의와 왕실의 권위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굳건하게 지켜 온 특이한 대립한 자금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면서도 타 종교에 대하여도 관대한 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종교교류의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태국 남부의 밀레이 반도 북부에 위치한 할라파 등 5개 현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이슬람 신봉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정부는 '페니제도'를 통하여 이들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이슬람과 카톨릭의 갈등

이슬람은 불교와 카톨릭과 함께 동남아의 주요 종교의 하나이다. 동남아 10개국 인구가 4억 4천만으로

□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방안대토론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통일의 좌표

고민의 지점, 통일의 성격규정과 체제논의의 선우차 문제 등

동국대학교 총학생회가 제방 50주년을 맞아 '통일운동의 실질적 성과를 쓰기 위하여'는 취지 아래 지난 23일(화) 오후 4시 동국대 학림관 소강당에서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기독교사회과학연구원 이신태 선임연구원을 비롯 재 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태웅 의장 등 6명의 토론자가 참가했다. 본회는 이날 토론회의 발제·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회해를 먼저 이루자는 것이 북경으로 위의 두 방안은 달리 단계가 설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통일방안의 비교 속에서 올바른 통일방안과 합치점을 형성하는 등 한국과 남북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토론회의 취지였다.

먼저 '북단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제국주의적 분단 정책에 기인했기 때문에 통일도 그 자체가 계급적인 문제가 아닌 진민족적 문제'임에도 정부와 김대중총리의 통일방안은 민족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세의 간섭을 쉽게 허용할 수 밖에 없다.

통일방안 마련은 현 통일운동의 분명한 이정표를 세워주고 남북과 북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보폭을 같이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올바른 통일방안은 '집단·국가적 이익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남북의 이익을 동등하게 반영하고 7천만 개체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철저하게 전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후 특히 김대중총리의 통일방안은 4대강국에 의한 평화보장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원리를 외세에 의해 평화·통일을 보장받으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 남한측의 통일방안은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남북의 '사드' 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이는 통일실현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지금까지 제시된 통일방안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자유·평화·민주의 원칙 하에 공정한 대안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 주내용인 데 이 방안은 평화·협력·남북연합, 통일국가 구성이라는 3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김대중총리의 평화국민합체방안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이라는 3원칙 하에 평화국민합체방안을 먼저 이룬 후 연방제 단계를 거쳐 완전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후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3대원칙의 기치 외에도 통일의 성격과 체제의 선후차 문제, 통일의 참여하는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각자 지역지지를 실시하는 것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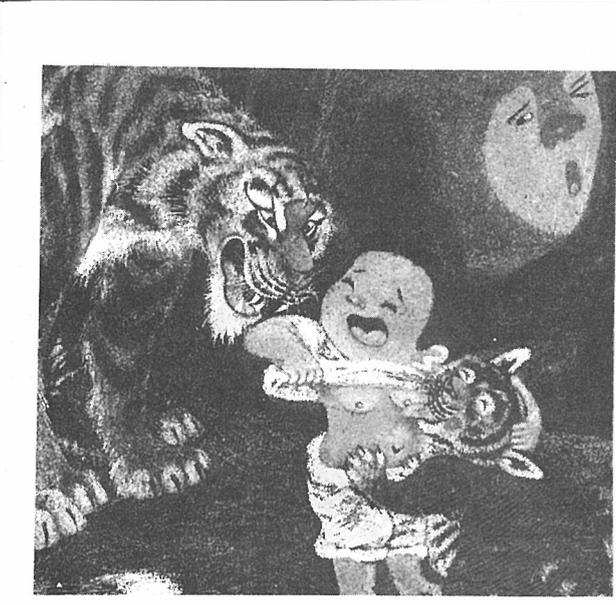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체제의 문제는 후대에 맡기고 민족의

의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는다면 산짐승은 떡장수 아바네와 그의 아들, 딸까지 탐내 했습니다. 91년 사실권 회수, 93년 성적조정 적용, 94년 8명 기차해직, 95년 조반소·광고대행사 선진권 10년 가까이 동결된 기차수당 등등. 오직 외대학부의 정상발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학교측의 요구에도 수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차들의 생명인 편집자들권을 승두리째 달라고 합니다. 외대학보를 지지하는 학우여러분! 더 많은 것을 빼앗길 지도 모릅니다.

□ '반미불매' '빛나는 전망' 등 조직사건의 전망

5월 대란설 현실화

사건 이틀전 PC통신에 사전계획 폭로돼 지자체 앞둔 공안정국 조성 목적

지난 15일(월) 고려대의 '반미 불매' 조직사건이 터지자 이틀전인 13일(토) 하이텔을 통한 '반미 불매'를 위한 모임 '반미' 전국 대학생기자연합회'에는 정대홍(한국대학총학생회장인 의정) 명의 글이 속보형태로 올라왔다.

"검찰이 고대에서 또다시 조직 사건 준비중"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최근 조직사건의 기미가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공안정국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자가 민족고대에 드려 주고 있다. 이미 금년 들어 부산 대 '지구대우선'에 이어 수원 캠퍼스, 인천대 등에서 학우들이 범법연행되었고, 서울에도 전국 수습생 학교, 이대에도 전국 4개교의 학교에서 조직사건이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고대도 이 중 하나이며, 각종 언론 기사나 그 소식통을 의뢰한 안기부와 서정시경 대공본실에서 사안이 조직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거

조 조직까지 작성이었다고 한다. 일차적인 검거 시점은 5월 중순(반미로지급)을 전후로 계획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언론의 공격이 연루되기 위해 의정 출신인 대인 반대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고 한다."고 적혀있다.

이글이 실린지 이틀뒤인 15일(월) 새벽 5시경 7명의 고대생(반대생 4명)들이 일제히 연행됐고,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15명의 학생(부산대 6명, 동아대 5명, 부산여대 1명, 부산여대 3명)들이 '빛나는 전망'이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긴급구속되었다.

한편 한총련과 고대 총학생회는 일출부터 고대를 둘러싸고 언론보도의 전과가 계속되는 등 이러한 정황을 들어 이 사건이 "한총련의 의도로 선전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17일(수) 증거보충으로 끌려나온 고려대 최호연(법대 93)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한총련 의장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직명의로 밝혀진 '반미 불매'는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흥행할 당시, 학생회 산전부 일을 하는 학생이 장난삼아 '반대' 앞에 불인 구호로 확인됐다.

수사과정상에서도 짜맞추기식 강압수사의 흔적들이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공본실에 있는 고려대 반전경(교육학과) 90 양은 수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으로 감양적인 불투명도 자체가 감양적이며 대한 형량(1992)부터 단식과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변호사 집결을 통해 해결했다.

또 기무사에 있는 고려대의 이 동원군과 오백준군은 군인이라는



각 지역 대학에 조직사건의 광풍이 다시 불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월) 고려대학교 학생 20여명이 서정시경 앞에서 고대 '반미불매' 조직사건과 관련, 구속유죄 석방과 '불법연행 중단'을 요구하던 중 진두장학생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고 있다.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감양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 이틀전인 경우 다른 학생의 진술서를 내밀고 취우자택을 받아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대대 부총학생회장인 '이반' 사건은 지자체선거운을 앞둔 정국에 계획된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 '전반' 비호 총장 발언이 무기를 실어넣은 감양적수사의 정황을 감안한 반전 경의 이해에 의해 일차적인 조직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입은 지자체 선거운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한총련 관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91년 정경대-김귀경 일사의 죽음으로 정경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6명이 6.3 중앙실종선사리 폭행사건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으로 인한 지방의원으로서 입성을 거두었다는 점은 이러한 정황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현재 이러한 학생운동에 대한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대회 개최 전교조 합법화·교육개혁 등 의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 6주년을 맞아 개최한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지난 28일(토) 한양대 노년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각 지역 교사와 사범대 학생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결의문에서 "강건한 교육개혁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하루전인 27일(금) 동국대 민회광장에서는 '김영삼정권의 허구적 교육개혁 본색의 폭격과 사대 정위를 위한 7만 여교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를 준비한 교육대학총학생회연합(교총련)과 서울지역사범대학의회(서사범) 등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현실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폭격과 사대를 저지하기 위해 결속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고대의 사범대의 폭격과 사대를 위한 1차 투쟁의 것으로 시민들에게 해빙교사의 주장을 알려내겠다"고 이번 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시가행진을 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종로광장에서 정란후 해산하였다.

미군범죄 규탄대회 전국에서 열려

연일 발상하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한 규탄행위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진행됐다. 지난 23일(토) 서울 명동시장 앞에서 주관인 미군범죄 규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27일(금)까지 계속됐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6일(토) 미군범죄 규탄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미 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했던 이 지역 대학생 18명이 발명연행됐다.

운동본부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강제징집 미군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한미행정협정 종료의사를 밝혀내겠다"고 밝히고 "정부는 사법권과 관련한 협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방적인 수정으로는 주민이군문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한미협정의 개편, 발취미군에 대한 공안정국 수습과 단속 차질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9일(일) 발표했다. 한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미군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은 행정협정 미행으로 인한 미군의 식량지원 사교이다"라고 규정하고 "선진문명보급과 항의방문을 밝혀내야 하는 운동본부의 사위에 적극 참여하여 미군범죄의 근원과 한미행정 협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탄압 분쇄와 민주노총 향한 노동자 결의대회

'현대자동차의 한국공신노조 분규와 관련한 노동탄압 반대집회'가 지난 27일(토)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열렸다.

서울의 경우 대교로 마로니에 공안에서는 노동자의 학생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운동 탄압분쇄와 95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대회를 준비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회의(공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한국공신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 5월 중순 초 정의 집중 2인주노동자 결의문을 사수할 것 3인결의문과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개선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종로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한국공신노조 분규정황을 전파하고 있는 명동시장으로 돌아와 5월 27일(토) 저녁 8시에 50여명의 선진기업에 대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탄압에 관한 내용외에도 분규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정소설 반민사 포함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주민들의 참여에 힘입어 결의문 낭독을 진행하며 선전전을 했다.

노동탄압 현황과 정부의 의도

노동계의 움직임이 한층 절실해질 수 있을 만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체행동에 하지 않은 기업들의 거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분신한 동료들을 위해 집회를 하던 노동자들이 발명연행도 연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에 대해 일부에서 지자체선거운과 민주노총 취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들여보았다.

지자체 승리(?) 위한 문민식 노동탄압 공안 분위기 조성·민주노총건설 와해 의도 엿보여

이 정부가 내세웠던 노사협조주의의 실재라는 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이다. 정부는 물론, 노사간의 자율협상과 무분규의 해 등을 외치며 노동계의 움직임을 막아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 10월에 민주노총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정부의 대응도 강도가 높아지는 듯 했다.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5-6명밖에 뽑았다. 다른 게 있다면 김영삼정권은 언론을 통해 대고 도청에 탄압했다"는 게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현정국의 노동탄압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응에는 두가지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 건설로 집중되는 단위 노조간의 연대를 막으려는 것이다. 세계화를 추진하며 재벌회주의 성장정책을 집행하는 공안정국이 있는 정부에게는 민주노총의 존재가 위협적인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총련과 같이 궤변의 조인원을 가진 거대한 공공부문노조가 끼치는 영향은 반대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간부들을 구속하고 "재난자가 분규가 개입했다"는 식의 수사방법을 통해 노조를 과격하게 왜곡선전하고 각각의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 민주노총으로 모이려는 노동자

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공론화 의견이다.

둘째, 오는 6월 27일 일제히 지자체 선거운을 앞둔 공안정국 조성과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하려 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대선이고 등으로 인해 다수당 민자당의 간판을 걸고 있는 선거에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이 앞날의 두려움인 김영삼정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상을 미고 회사측과 같은 보수세력의 표를 묶어주기 위해 노동운동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조를 국가개발의 원동력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의도 엿보인다. 주요선거운을 앞둔 정부의 공안정국조작책은 이미 지난 5-6월 시절 '금강산 별 사신' 등으로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성사되지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첫째로는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이 커져나간다. 한국공신노조 집행부측은 정부가 사법처리나 경찰처리를 할 것을 경우 모든 약항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측도 6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정경대선선거 기간을 앞둔 주일 정도 앞까지도 결정했다. 또 3차개입작업

노동계의 움직임이 한층 절실해질 수 있을 만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체행동에 하지 않은 기업들의 거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분신한 동료들을 위해 집회를 하던 노동자들이 발명연행도 연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에 대해 일부에서 지자체선거운과 민주노총 취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들여보았다.

일차적인 검거 시점은 5월 중순(반미로지급)을 전후로 계획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언론의 공격이 연루되기 위해 의정 출신인 대인 반대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고 한다."고 적혀있다.

이글이 실린지 이틀뒤인 15일(월) 새벽 5시경 7명의 고대생(반대생 4명)들이 일제히 연행됐고, 같은 시각 부산에서도 15명의 학생(부산대 6명, 동아대 5명, 부산여대 1명, 부산여대 3명)들이 '빛나는 전망'이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긴급구속되었다.

한편 한총련과 고대 총학생회는 일출부터 고대를 둘러싸고 언론보도의 전과가 계속되는 등 이러한 정황을 들어 이 사건이 "한총련의 의도로 선전된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간교수님은 안기부편(?)

1. 동료교수인 박창희교수 사건마저도

사생활까지 응유하며 박창희교수 사건 축소·은폐하려해

5월 9일 작성문을 만들기 위해 8일(월)아침에 편집실을 만난 주간교수는 박창희교수의 사생활을 응유하며 "그런 일안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작원을 만나고 다녔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안기부수사발표에서 제 기뢰의 의혹"에 관한 기사(주재민)를 일부 수성했다.

부의 가족행위도 믿을 수 없다는 투로 계속 말을 추궁했다. 이에 화가 난 말을 편집대용이 기록된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동료교수를 듣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며 "주간교수님도 안기부에서 고문 당하던 없는 말을 지어낼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창희교수가 "나도 예전에는 안기부가 어느정도 필요한 조직이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사건으로 안기부가 감점생산공방임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주간교수는 큰소리로 "당신 말조심해"라며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 안기부는 필요한 조직이다"고 말했다.

심적이고 통발고 있는 박교수 딸까지 불러내어 추궁

5월 16일자에 실리게 될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족행위'라는 기사(주재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간교수는 일본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도우러 서울에 온 박교수의 딸(박성아)을 15일(월) 학교로 불러냈다.

주간교수는 박창희교수가 딸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다. 심을 계속 강요하면서, 안기

부의 가족행위도 믿을 수 없다는 투로 계속 말을 추궁했다. 이에 화가 난 말을 편집대용이 기록된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동료교수를 듣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며 "주간교수님도 안기부에서 고문 당하던 없는 말을 지어낼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창희교수가 "나도 예전에는 안기부가 어느정도 필요한 조직이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사건으로 안기부가 감점생산공방임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주간교수는 큰소리로 "당신 말조심해"라며 "우리나라같은 상황에서 안기부는 필요한 조직이다"고 말했다.

2. 주간교수의 극단적 냉전주의

"너 안기부에 신고할 수도 있어"

5월 30일자 신문에 통일당이 6000천 원의 안기부 외 대학보에서는: 본교 박창희교수의 조작수사로 드러난 안기부의 반민권성, 반동원성을 알려내기 위해 기획광고(안기부의 "너들은 약도"라는 스티커를 풍자한 광고) 5월 29일에 게재)을 준비했으나 주간교수가 거부, 심지어 주간교수는 편집실에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면서 "편집장, 너가 안기부에 신고할 수도 있어"라고 협박.

고 이에 기자들은 심포지엄에서 교수들의 연구원들이 사용한 단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언론에서도 "김수석"이라고 쓰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자 기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빨갱이야"라는 말을 지시해 않았다.

"너희들은 다 빨갱이야"

5월 9일자 5면에 해방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리기사기 신년식이 있다.

그기사 내용중 "김일성주석사망 당시의 조문파동"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간교수는 "김일성주석"을 "김일성"이라고 쓸것을 주장했

5월 9일자 5면에 해방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리기사기 신년식이 있다.

그기사 내용중 "김일성주석사망 당시의 조문파동"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간교수는 "김일성주석"을 "김일성"이라고 쓸것을 주장했

▶한국통신 노동조합 시업대책국장 김성만(여 78)씨를 만나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공안분위기 조성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수배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나쁜 나라 위원장을 비롯한 64명의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 상당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질의 처사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유도했다고 생각된다. 또 정부와 조립업을 분리시켜 민주노총 진영과의 연대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한국통신의 문제를 ‘일급 8천원 올리기’로 축소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통신의 일급은 경쟁사인 테코콤의 68%밖에 되지 않는다. 그간 비리에서 진행된 민영화와 통신개방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세계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통신사업을 담당하게 될 경우 114시서비스 같은 무익사업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노조가 대책없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가 함께 올바른 방향을 검토하고 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7년도부터 시작되는 통신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통신사업이란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인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국가의 정보개방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가 함께 올바른 방향을 검토하고 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준법투쟁이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며 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84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는데 이를 원래 출근시간을 9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중·경 처하겠다고 했는데
 “법대로 준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화를 하려면 얼마든지 대화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조의 요구를 위반한다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단상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정부는 ‘국가전복죄’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의 생활에 즉각적인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단체행동도 금지시켰다. 그러나 진실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쪽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정부만을 알리는데 대해 정죄하지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파업을 목표로 시작하는 노조는 없다. 그해에 넘겨지기를 갖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도록 유도해 국민들의 인종화구유를 자극하려 하고 있다. 주요 선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공안정 조성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주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논거만으로서는 대야상 정부의 실정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박내선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폭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한미행정협정의 사법권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화) 오후 1시경 서울 정동앞에서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시민·학생들이 폭행사태를 선전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 계속되는 주한미군 범죄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한미행정협 문제점
수사과정에서도 미친척(?) 하는 미군
“한미행정협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잇단 미군폭행에 정부도 일부개정 추진

지난 19일(금)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40대 주부를 성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일) 춘천에서는 미군병사들이 지나가던 택시를 세우고 집단폭행을 부렸다.
 22일(월) 의정부에서는 야산 공동묘지에서 미군 전용승용 한국인여중학생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4일(수) 수원에서는 접촉사고 시비를 달린 일가족 3명이 또 미군한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 5월 동안 4건의 미군 폭행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범죄가 하루 평균 2.5건, 총 8백91건이라는 것을 가늠하면 이번 사건들은 범상의 일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이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정유진 간사는 “미군들에 의한 범죄는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그것도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40대 주부를 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한 민기 합은 사건이 발생되어 인민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도 곧 시끄러워질 것이다”라며 “이제 SBS방송국에서 주한미군관련 기폭을 제지한다든 운동본부에 찾아와 취재를 해 왔는데 오늘 아침 기지로 부터 뒷사람들의 인력으로 방형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드득 정부와 언론이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취하하러 하는 것은 주한미군 범죄를 애기하게 되면 한미행정협정의 기원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미폭속적 정부의 자세에 화상이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한미행정협(한미협)의 불명등항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지난 19일(금) 서울 지하철 3호선 승무원의 구내에서 저질러진 미군들의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미

군 헌병들 5명을 연행했으나 미군측에서 신병영을 요청했으나 1차 수사원이 연행 34시간 만에 이들을 미군측에 넘겨버렸다. 결국 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미군측은 미군측 경찰을 신병영을 인도했지만 혐의자는 이미 미군 당국과 자체조사 과정에서 말을 맞춘 뒤였다. 우리 경찰측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한국인 승객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척하며 피해자 조종국에게 대질심문에서 조작 “탈리버진 뉴스에서 조사를 처음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미행정협 문제점으로 인해 여론의 화살이 정부에 돌아와야 할까 정부는 한미행정협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또한 “한번 보여 주시지 개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규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데 한미행정협의 문제점은 이 문제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한미 행정협정 제 2조 1항에 의해서 주한미군은 전국 1백 20여개의 미군기지의 완전무장 사용이 보장되고 있다. 미군기지 땅을 다칠때만 서울 경찰의 크기로 전 9백만평인데 이를 정당한 계약대로 바꾸어 보면 임차료만도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한 기사사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인명자는 사용토지를 반납하게 될 것이지만 환경오염 등에 대한 미국측의 원상회복이나 손해 배상의 의무가 제 4조 1항에 의해 면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관련이 가지고 있는 통관관련과 과세 등의 폭에 관한 관련규도 또한 긴급히 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행정협을 읽어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인가라는 단란한 물음에도 답하기 힘들것이라고 한다.
 대야상 불명등항 한미행정협은 존재선 안된다. 실사 미군이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취부)

긴급투고

6·3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족사의 대전환기에 맞이하는 “조국통일과 일본군국주의 부활 반대를 위한 남북한의 청년학생대회” 6·3대회는 통일위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제와 목표를 가진다. 우선 8·15 50주년 기념 민족통일행사를 전민족의 통일대축전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학생들의 결의를 모으게 되는 것이다. 올초 민주노총 준비위, 민족예술인 선언할,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등 5개 단체가 남북당국과 함께 각계각층 정당, 사회단체에 제안한 8·15공동선언을 분단 50년째의 8·15결속행사를 남북이 함께 치유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뜻을 갖고 있다. 6·3은 바로 8·15결속행사로 달려가는 정진대리의 역할을 한다.
 둘째 50년 통일원년 실현의 관건인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이념한 청년학생들의 만남을 성사시켜 통일의 견인차가 될 동 청년학생들과의 단결의 수준과 폭을 넓힌다.
 넷째 국내에는 민족의 분단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존재한다. 6·3대회는 청년학생들과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모아 이념 반통일세력의 민족 분열정황에 세기를 박게 할 것이다.
 이 과제들은 학생 한명 한명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50년째 참가를 목표로 하는 통일선언문이다. 위와 다자간 회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명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선언문은 6·3대회장에서

북과 해외의 통일선언문과 합쳐져 남북한의 이념한 청년학생의 민족통일선언문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통일열망이 많은 성과를 낳을것에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결의가 높은 몇몇 사람 중심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방도이다. 또한 6월 3일 4대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통해 청년학생의 통일열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각과에서의 과회들을 통해 통일선언문과 6·3대회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서명할 모금, 6·3대회 참가의 결의를 다질 것이다.
 이렇게 준비되는 6·3대회는 기존의 집회식 행사라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대학별 가정별, 통일 대대론회, 아시아 각국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청년 평화포럼,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이 및 백일장대회, 남북한의 청년학생 만남 강연회 마다,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한의 청년학생 통일선언문, 평화통일선언문, 나라 건국대 보는 세력이 존재한다. 6·3대회는 청년학생들과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모아 이념 반통일세력의 민족 분열정황에 세기를 박게 할 것이다.
 50년 통일원년의 아픔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우리 민족·제대로 정치되어 있다. 6·3대회는 민족의 반 통일 약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반도 근교와 전쟁의 세악한 정안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자주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방도를 마련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이 과제들은 학생 한명 한명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50년째 참가를 목표로 하는 통일선언문이다. 위와 다자간 회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명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선언문은 6·3대회장에서

오상우
 (8·15 50주년 민족통일행사를
 통일위원회 추진부총장, 남·북·해외
 청년학생대회 기획위원)

전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남북한의 동포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발표

조국의 신하는 눈부시게 아름답건 돌이보면 분단이 합쳐서 민족의 한이 터질 듯하다. 분단 50년, 아제 여기까지 왔건만 조국 강산은 다산이나 하늘을 벗어났건만 겨레의 혈맥과 지맥은 원연한 분단선으로 여전히 고통에 물들여지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지관 동포임에도 원수로 살아왔으니 여태껏 총칼을 겨누고 살아왔으니, 분단 반세기라는 놀라운 속이 우리는 새삼 민족의 위안감을 되돌아 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깊은 실음을 안고 있다.
 세상은 원의 시대가 끝났다고 화해와 평등의 밝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우리 민족은 분단의 무게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세월동안 의외에 깊은 폭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여저저 민족의 단합된 힘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실움이 아닐수 없다.
 세상은 이제 이념과 편벽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권위가 시대의 거기로 따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구촌의 질서는 단란한 담자제거만 고통이 따르는 어두운 형벌일 것이다.
 통일을 위한 길위에 대야상 민족의 대결을 조정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만나고 싶다.
 마주하며 일색으로 지나간 과거가 굳이 풀지 않아도 좋을 사람들. 언연년대를 함께 살아갈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싶다.
 이념이 낫 팔면 오도기도 못하는가. 우리는 이제 어둠과 추운 분단의 세월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남북, 북, 해외의 한마음 한뜻의 청년학생들은 통일원년 50년을 맞아 민족의 새 영광, 조국통일을 위해 손을 잡고 바꿀 것을 은 거늘과 세계민방에 결의한 선언한다.



분 단 기 행 4

“이제는 치유해야 할 상처들...”

“무엇때문인가? 분단독재 정권을 우리해!”

중앙정보국에서 국가안기획부로 50년 분단을 영원이라 믿으며 살고있는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수천명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이고 감춰오며 만들어 가워둔 것 뿐 아니라 4천만 국민의 마음에 분단을 영구화 시키려 조작하고 있는 음모이다

국가안전 기획부 → 독재정권 안전 기획부
국가 분단 기획부

주변에 흑시 이런 안기부원 없습니까? 보안사 요원도 팬찮습니다



같은 순한 양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가장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모이고 모여 큰힘이 된다면 이런 만민주, 만사회 반동일, 만민권의 안기부 머위는 해체시킬 수 있겠지요?!!

통일맞이 6천 왕산인모임과 외대학보가 함께합니다

